

쟁점 법안 또 몸싸움...국회 '극한 대치'

국회는 22일 11개 상임위 및 특위 별도 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한나라당 단독 상정에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봉쇄하면서 공전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의 처리와 관련, 오는 25일까지 각급체널을 통한 대야(對野) 접촉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민주당은 단독상정에 대한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재발방지 및 사과를 요구하며 대화에 응하지 않아 물밑 접촉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예정됐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한 가운데 한나라당 측이 전체회의 개최를 사실상 포기, 열리지 못했으며 기획재정위도 경제재정소위가 무산됐다.

민주당 상임위 봉쇄...한나라 정보위 진입 충돌

"대야 접촉 강화" "FTA 상정 사과부터" 팽팽

정보위원회의 경우 한나라당이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봉쇄로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다.

특히 한나라당 정보위원들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민주당과 이에 항의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였다.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해 있지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이 5일째 회의실을 점거하

고 있는 정부위에서는 한국산업은행법과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공청회를 방지해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며 민주당 측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다.

행자위에서는 한나라당 당직자가 민주당 당직자들의 사진을 찍다가 발각돼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대화로써 타협이 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며 "계속해서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대야(對野) 접촉을 강화할 것"이라며 대화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연내 처리키로 한 100대 쟁점법안 가운데 우선 처리법안

50개를 선정했으며 이들 법안에 대해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조정하되 25일 이후에는 강공을 모색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문방위 앞 복도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타협처리 방침과 관련, "날치기 처리를 위한 수순 밟기"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체 상임위 봉쇄 방침을 재확인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한나라당의 중점처리 100대 법안 중 30개 정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도청을 합법화하고 시위시 마스크만 써도 잡아갔다는 법 등 인권유린법안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결국은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며 "그 착상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은 22일 의원 총회에서 국토해양위 회의 문건을 공개하며 "MB악법 날치기 계획이 입증됐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국토해양위 토의 결과'라는 문건을 공개, "한나라당은 쟁점법안이 없는 국토해양위에서도 날치기 처리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민주, 與 '날치기 문건' 공개 파문

"겉으론 대화...속으론 직권상정" 비난

한나라당이 민주당과의 대화를 제의하면서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관련 30여개 법안에 대해 무더기로 직권상정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내부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단독상정이 이뤄진 직후인 지난 18일 오후 3시에 열린 '국토해양위 토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국토위 위 소속 한나라당 7명 의원의 토의결과 문건을 공개했다.

한나라당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단독상정이 이뤄진 직후인 지난 18일 오후 3시에 열린 '국토해양위 토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국토위 위 소속 한나라당 7명 의원의 토의결과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쟁점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라며 "이(토공과 공공의) 통합공사는 공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시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명분도 뚜렷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적시돼 있다.

또한, "MB(이명박) 정부 공공기업선진화시책의 핵심이므로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고 직권상정하여 처리함이 불가피하다"고 명시, 직권상정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나아가 "민생대책과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과 경제회생 및 일자리창출 관련법안도 최우선순위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함께 직권상정(10건)해야 한다"며 고령자주거안정법,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장기공

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 공공토지비축법 등을 예로 제시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국토위는 "이왕 직권상정 처리가 불가피하다면 국정과제 및 규제개혁 법안 2건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끝난 직후 브리핑에서 "입으로는 대화 운하면서, 뒤에 숨어 또다시 반민주 악법 날치기 계획서를 만들었다"며 "박희태 대표가 '최후의 대화'라는 표현을 써가며 야당에 거짓 제스처를 보냈다"고 힐난했다.

한나라당 김경권 원내대변인은 "야당과 대화 안 될 시에 직권상정 하겠다는 내용인데 뭐 그렇게 대단한 문건처럼 반응하느냐"며 "한나라당 상임위 회의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용두사미' 쌀 직불금 특위

정쟁 몰두...성과없이 끝나

민주당 '부당수령자' 수사의뢰

국회 쌀소득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실제 규명을 위한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는 등 성과를 보지 못하고 29일 활동을 마무리한다.

직불금 부당수령자 적발과 책임규명, 제도개선을 목표로 지난달 10일 시작된 국조는 22일 현재까지 조사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지만 자료 제출과 명단-대통령 기록물 공개 등의 절차적인 문제로 논쟁만 벌이다 소득없이 막을 내리게 됐다.

국조는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의 직불금 부당수령 논란으로 관심속에 출발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직업과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명단 제출을 거부, 보름 이상 파행했다.

여야는 또 감사원에서 온 명단을 공유하는 방식을 놓고도 큰 이견을 보였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는 문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가세해 논쟁을 벌였다.

이어 건보공단의 자료제출로 정상화하는 듯 했던 국조는 명단 공개 범위와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로 다시 어려움에 빠졌다.

특히 민주당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 한나라당과 마찰을 빚으며 열흘 이상 파행해 이날 16~19일 예정됐던 청문회와 기관 종합보고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국조 기간 연장을 위해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태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증인채택에 대한 합의가 없는 기간 연장은 의미가 없다고 맞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44일간 열렸던 국조는 국정감사·조사법에 규정된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하고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직불금 국조특위위원들은 22일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등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등 2천882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를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여야 만남, 직권중재 하겠다"

국회 공전...고민 깊어가는 김형오 국회의장

임시국회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야당과 25일까지는 대화하겠다"고 밝힌 이날까지는 커다란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때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을 강행할지, 아니면 여야 협상을 더 지켜볼지 등 김 의장이 행보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22일 현재 입장 정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그러면서 오전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헌정회 초청 강연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내일까지 무조건 만나야 할 것"이라며 "내일 오전까지 만남이 없다면 오후 만남을 직권중재하고 참여하는 정당과만 협의를 하겠다"고 대화를 촉구했다.

법안 처리와 관련,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의장의 우선적인 입장은 여야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직권상정보다는 합의를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급하다고 해도 그렇게(직권상정) 하기는 어렵다"며 "예산처럼 필요불가결하다는 인식이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의장이 여야간 합의를 위해 최대한의 중재역할을 하되 민생에 시급하거나 위험결정 등으로 인해 조속개정이 불가피한 법안은 선별적으로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령 '공직선거법'의 경우,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 4월에 열리는 보궐선거 및 교육감 선거가 불가능해져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위기의 농어촌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 김영록 의원 오늘 해남서 토론회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는 등 농어촌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해남에서 농어촌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완도·진도)은 "23일 오후 해남군 문화

예술회관에서 '위기의 농어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는 이천일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과 이기운 순천대학교 농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



표를 하고 이병연 해남군 농민회 사무국장과 이양래 진도군 농산유통과장, 신우철 농림수산식품부 완도수산사무소장, 박종기 환경과 농업을 위한 모인 회장, 김성주 신지식어업인회 회장 등 5명이 토론회자로 참여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규조이 여행사

234-3222

1박2일 제주 여행

450,000

510,000

680,000

1,350,000

420,000

1박2일 제주 여행

북쪽 문화탐방	420,000
북쪽 문화탐방	440,000
상해/제주/소주	290,000
상해/부산/서해	390,000
상해/부산(온천해수욕장)	590,000

대만 화관 이후 (온천해수) 790,000

대만 화관 이후 (101빌딩관광) 890,000

제주 2박3일 패키지

99,000

제주 해돋이 투어 3일 패키지

270,000	4박 3일
250,000	3박 3일
185,000	2박 2일
150,000	1박 1일